

“대선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평등법)

한국교회법학회 평등법 제정 시도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한재 교수)가 “대통령과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또한 “대선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 기독교계와 국민들 앞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고, 대선 후보 간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가 선결조건임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 임기 중 2020년 8월 17일, 기독교계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한국교회법학회는 “최근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 검토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선에서 기독교계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 지지를 얻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배신감이 든다”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할 만큼 차별이 심각하기”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한 국민은 응답자 1,000명 중 27.2%에 불과했다.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주된 목적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경험은 응답자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의 차별이었다.

교회법학회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20여 가지의 차별사유를 일괄적으로 묶어 과도한 민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은 국민적 공감과 동의에 기반한 시급한 요구도 아니며, 불필요한 과잉입법이라는 반증인 것이다”며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교회법학회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 산업계, 교육계 등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 법안이 차별 없는 사회의 구현이라는 그럴듯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가치를 허물고, 하나의 가치관만을 강요하는 新전체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기에”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가지고 법 위반자에게 가혹한 민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수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다수 국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는 ‘역차별’ 일 뿐 아니라 묻지마 고발과 소송을 남발해 국민 각계 각 층의 갈등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영국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시행 중인 국가에서는 이미 역차별의 폐해와 종교의 자유 침해

와 무수한 사회 갈등의 부정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다”며 “그러므로 여기에 더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입법 쿠데타며 양성평등기본법, 주민등록법, 병역법, 교육법 등 남녀의 성별 구분을 기초로 한 현행법체계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교회법학회는 “인기를 불과 몇 달도 남기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갈등을 부추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논의를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할 것”이라며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내는 정당과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약으로 표명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종교의 자유, 코로나19 엄중 상황이라도 보장돼야”

예자연, 집합금지 명령 취소 1심 소송 기각에 관한 입장

헌법상에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불인정한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즉시 항소할 것을 알립니다.

오늘 사법부에서 세계교회협의회 등이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교회 예배의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행정 소송의 결과는 ‘코로나19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말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불인정한 판결이다.

그동안 행정당국의 차별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였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이를 보장하는 헌법 20조의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당하였으며, 이중 유독 교회의 예배만이 더욱 차별과 불평등한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정부의 문제점보다 공공복리를 앞세워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그동안 행정 당국의 교회의 예배만을 차별한 데는 나름 그 이유가 있다. 실제 대면 예배가 금지된 배경에는 2020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하위 조차된 통계를 바탕으로 시작된 이 발언은 7월 10일 ‘교회 핵심 방역수칙’으로 하달되어 위반 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후 작년 광복절을 기점으로 발생한 2차 대유행도 정부의 안이하고 요관적인 휴식 정책에서 비롯되었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평화문 집회를 봉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전혀 무관한 정성적 교회의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수보회의(20. 7. 21)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지친 국민에게 귀중한 휴식을 주겠다” 지시 이후 8월 3일 문체부에서는 900여 원의 문화소식지 할인권을 배포하였다.

2020년 8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교회법’이라는 하위 통제로 현장 예배를 금지하였다. 이는 종교사실(이 아닌 일반 다중시설)과의 형평성과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종교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설과 차별을 두었고, 또한 종교시설 중에도 유독 개신교

현장 예배에 대하여 금지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 허용한다’고 하여, 교회에 대하여 선심을 쓰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면 예배는 물론 비대면 예배도 당연히 금지되지만, 특별히 비대면 방식의 정규 예배만을 허용해 준다는 식이다. 이는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인 독재국가의 발상이다.

방역을 이유로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정의를 정부가 정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도 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가 법률의 근거 없이 명령으로 예배를 통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또한 이를 알고도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종교 의식에 대하여 무종교인들에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대하여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

이유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믿으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평소에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정해 주어야 한다. 그럴 때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가치는 빛나게 될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1월 19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정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한보(예배), 심하빈 · 임영문 목사 · 심동섭(법률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쿼드 체제’ 출범에 따른 대한민국 안보 논평

민주질서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쿼드 플러스 참여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중국 견제라는 쿼드 체제 출범의 목적과 전략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한다.

민주질서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쿼드 플러스 참여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쿼드 체제(Quad) 구축 방안이 제기되고 지난 2021년 3월 화상 모임 이후 첫 정상 대면 방식의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쿼드 체제는 공식 출범하였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들이 지난 2021년 9월 24일 회담을 가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 회원국 정상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스티브 모리스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반도체 공급망 강화분체를 비롯해 불법 해양 조업 퇴치, 5G 파트너십 구축, 우주분야 협력 강화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살통나비는 쿼드체제 출범이 앞으로 세계 안보정세에 큰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쿼드 플러스’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전평하는 바이다.

1. 첫 ‘쿼드’ 정상회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민주주의와 평화 강조하여 중국을 견제하였다.

첫 쿼드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무엇보다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힘을 쏟고 동맹 규합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다른 세 나라가 합세한 결정체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집단안보체제 출범을 예고하는 것이다.

모리스 호주 총리는 “인도 태평양이 강압이 없고 주권이 존중받으며 분쟁이 국제법에 부합해 평화롭게 해결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가 일본 총리도 회담 후 기자회견과 만나 “쿼드 정상들이 매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초창기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개월 전 만났을 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궁정적 야언다를

진전시키기 위해 구체적 약속을 했던 것이 이제 훌륭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자랑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쿼드 4개국 정상 중 누구도 명시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견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2. 쿼드 체제는 미국이 호주와 인도와 협력하여 전체주의 국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다.

쿼드 정상들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역설한 것은 곧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약제하려는 데 있다. 관련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이 충돌하는 형국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면 호주와 중국 간 최근 표출된 갈등관계에서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호주정부의 ‘쿼드’ 회원국 참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를 과시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사적 강화를 추진하려는 데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리스 호주 총리는 5억 8000만 달러(약 6450억 원)를 들여 북방 군사기지 4 곳을 개선하고, 미국과 기동훈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북방 군사기지 개선 작업은 올해 시작해서 2026년 마무리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호주 북부지역 4곳 군 기지의 개선, 대형 항공기를 위한 활주로 연장, 사적장 정비 및 국방인력과 미 해병대를 위한 새로운 훈련시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호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불특정 긴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북방영토에 군사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호주와 중국 간에 외교 및 무역 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호주 측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청한 이후이다. 이에 중국은 호주산 제품에 폭탄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무역 보복에 나섰다.

지난해 11월에는 캔버라 주재 중국 대사관은 코로나19 기원 조사, 5G(6세대 이동통신)시장 회이 퇴출, 대만·홍콩·신장위구르 분체 국제포럼 주도 등 호주의 반중시제 14가지가 적힌 문건을 발표

하면서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중국도 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응하여 호주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과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전략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에는 호주 연방 정부가 빅토리아 주정부의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협정을 파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중국의 핵심 외교 전략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인도 모디 총리 역시 “새로운 시설들이 미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쿼드체제가 대중국 방어 전략에 힘을 합하고 있는 형국이다.

3. 미국은 쿼드 체제에 발맞추어 자유민주체제 지키려는 대만의 안보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지는 또 다른 긴장 국면은 미국이 중국을 향해 대만에서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사실이다.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면서 양국은 둘러싼 중국의 무력시위도 거세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1일부터 이틀간 중국 군용기 77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만 국방부는 크게 반발했다.

미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의 성명은 “미국은 대만 인민에서 중국의 군사활동이 도발적이고도 불안정하며, 최초의 위험이 있고 예내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미·중 간 3개 공동성명, 대만관계법(대만 무기 판매 의무화)과 ‘6항 보증(레이건 대통령의 대만 지원 구두 원칙)’에 근거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확고하며(rock solid)’, 대만 해협과 역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대만과 공동의 번영, 안보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우방국들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다. 이는 우방국인 한국의 동참

을 기대한다는 뜻이면서 쿼드 플러스에 참가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4. 대한민국은 쿼드체제 출범에서 쿼드 플러스 참여요청과 참여를 막으려는 중국 사이에서 국익 중심의 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쿼드 체제’는 다특세력의 중심인 중국을 대상으로 해양세력이 포진하는 형국이다. 결국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한민국으로서 국가안보와 이익을 고려하여 보다 확고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 등 쿼드 국가들은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에 대해 중국은 참여하지 말도록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하게 동북아 정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고려하여 국가안보와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특히 ‘쿼드 플러스’ 참여가 남북관계에도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쿼드 첫 대면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의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을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 북한이 실질적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맹의 힘을 보태 강도를 높인 셈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대화제에는 그동안에도 수백 번 언급되었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의 핵심 주제인 핵 포기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리어 북한은 두 차례의 순항미사일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 이로 볼 때 북한의 기본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데다, 중국은 북한을 굳게 두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선택은 딜레마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북한 미사일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는 사실과 그간 미국과 한국이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었지만 번번이 거부한 것은 정작 북한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부작질한 발언이다. 북한의 미사일 강화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한 흔적이 없어 아쉽게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에 새로운 시각으로 답하게 해야 한다. 일방적인 양보는 결국 노예적 상태로 몰고 갈 뿐이다.

우리에게 중국은 ‘不可近不可遠(들가근불가원)’의 나라이다. 지리적 특수한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되는 나라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면서 국외의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외교적 전술을 펼쳐야 한다는 점이다.

5. 쿼드 참여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안보의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상호 견제 전략은 어제 오늘의 과제는 아니었다.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대립, 불신의 골이 형성되어 왔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여러 행동들이 중국의 발흥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으로 해석한다. 미국이 인권을 옹호하는 모습은 중국의 국내 정치 체계를 약화시키려는 계획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중국을 영입한 2인자에 묶어 두려는 최후 대결의 전조라고 설명한다.

이와 반대로 미국 측에서 보면 성장하는 중국이 미국의 우월한 입지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까지도 체계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영향력 있는 집단들은 냉전 시대의 구조권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이 주변지역에서 경제적, 군사적 지배력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패권까지 차지하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우려한다.

8면 하단으로 이어집니다